

완전 자본잠식 · 취약업종 기업도 ‘부실’ 판정

올해 부실기업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구조조정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 변동 상황, 산업·업종별 특성까지 반영해 기업들의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 주도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약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기 신용위협평가 과정에서 완전 자본잠식 기업, 취약 업종 기업을 포함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당국은 신용위협평가를 통해 구

금융당국 선정 기준 강화... 구조조정 대상 늘어날 전망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 곳을 선정할 바 있다.

현재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3곳, 37곳으로 모두 50곳의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들 중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도록 권유했다.

금융위는 그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평

가할 때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무 지표 이외에 산업·영양·경영 위험까지 살펴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기 신용위협평가를 통해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월 초, 11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들은 오는 4월까지 주채무 계열에 대한 구조평가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5월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건전성 관리를 진행한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 지침에 따라 5월까지 재무 상황 등을 점검받게 되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협약(MOU) 형태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조선·해운 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선박펀드에 대한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 참여기관간 양해각서도 3월 중순에 체결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 공백이 없도록 임시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효력 기간을 연장했고 4월까지 기촉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만들겠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16개 금융사 사이버보안 점검

금융당국, 사이버위기 경보 3단계인 ‘주의’로 격상따라

사이버 위기 경보가 3단계인 ‘주의’로 격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안 점검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외부에서의 침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보 단계 상황 이후 개별 금융회사에 체크리스트와 공문을 보냈고,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당국이 보낸 체크리스트 등을 근거로 사이버보안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금융보안원은 이를 취합해 피드백과 함께 금융사들에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기관별로 보안 관리 인력을 늘리고 일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침해 시도 동향 등을 금융보안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보안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등 16개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공격 징후가 나타난 곳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번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악성코드에 대한 업데이트와 백신 조치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미래부, 금융위, 국방위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가 북한에 의해 해킹 탈취된 사실이 지난 달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뱅킹 마비나 무단 계좌이체 등 대규모 금융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헬스바이크로 재미와 건강을

KT는 올레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며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한 3D 실감형 헬스바이크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올레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며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한 3D 실감형 헬스바이크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롯데카드 고객 자금세탁 분류 부실

금융감독원 두 회사 모두 제재

하나카드와 롯데카드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하나카드는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국가 고객을 낮은 위험 고객으로 분류했고, 롯데카드는 의심 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한 고객·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시스템이 위험 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하나카드는 개선 1건, 롯데카드는 개선 2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검사 결과, 하나카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협조국가인 이란 국적 고객 일부를 저

위험 고객으로 분류했다.

롯데카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모든 여신전문금융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효성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또 고객위협평가 모형에도 귀 금융 판매상 대부업자, 카지노 사업자, 환전업자와 같은 고위험 직업을 누락해 고객 위험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일어나는 자금세탁은 범인고객이 선불카드를 이용해 수익원에 이르는 자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제 기능을 못 할 경우 빈번하게 선불카드를 통해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고위험 고객을 사전에 잡아내기 어렵다고 금융원은 전했다.

수출입은행, 7억5000만 유로화채권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7억5000만 유로 규모의 유로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로화채권 발행은 2013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수은은 1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유로화채권의 만기는 3년이다. 금리는 3년 만기 유로화 스와프 금리 -0.174%에 0.5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0.406%다.

모두 88곳에서 15억 규모를 투자했다. 투자비율은 중앙은행 국제기구가 52%를 차지했고 자산운용사 30%, 연기금 및 보험사 8%, 은행 8% 등으로 구성됐다.

수은은 발행대금을 유럽과 이란 등에서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우리 기업의 유로화 대출 수요 발생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한국계 기관들이 달러화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수은은 이번 유로화채권 발행으로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고 차입시장을 다변화했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1월 시중통화량 2266.9조 전월대비 1.8% 증가

1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다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6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월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26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8.1%(평균·원계열 기준) 증가했다. 8%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월별로는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5%로 내려간 영향으로 광의통화는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상환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대비 10조 5000억원 늘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도 3조원 늘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8조4000억원)와 기타금융기관(8조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중 M2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한 8% 초반으로 추정됐다.

/인진수 기자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기준 운항거리로

아시아항공 등 6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지역별 부과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로 변경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 시 항공사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에 일정 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는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를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후 유가 변동 시에 기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한다.

그동안 유류할증료 부과권이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는 운항 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더 비싼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해외에는 미주권역에 포함돼 운항거리가 먼 오를랜드보다 할증료가 7달러 높게 부과됐다. 이에 아시아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종과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해 운항 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국토부로 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6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